

주간 통일정세

2016-11

Contents

I. 북한동향

1. 핵문제 및 외교안보
2. 대내 정치
3. 경제
4.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I. 북한동향

1.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北, 한미훈련에 반발…“사소한 기미 보이면 선제타격전 돌입”(3/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한미 양국군의 북한 주요 거점 진공작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합훈련에 반발하면서 “적들이 특수작전(참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즉시적인 선제타격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위협했음을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북한은 16일 ‘공화국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을 내고 “적들이 무엄하게도 우리의 전략적 중추지대에 대한 내륙진공작전을 골자로 하는 ‘2부 공격훈련’이라는 것을 강행하면서 제 죽을 줄 모르고 분별없이 날뛰고 있다” 비난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 성명은 “성명보다 더 신성한 우리의 최고 존엄에 도전해나선 특대형 도발자들은 그가 누구이건 하늘 아래 살아 숨 쉴 수 없게 모조리 죽탕처(몰골을 불품없이 만들다) 철저히 매장해버리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라고 말함.
 - 이어 성명은 “(북한) 국법에는 나라의 최고 존엄이 위협당하는 경우 그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나라들과 대상들은 핵타격 수단들을 포함한 모든 타격 수단들을 총동원해 선제 소멸하게 규제(규정)돼 있다”고 밝힘.

나. 주요 매체 논평

- 조선신보 “北 한미훈련에 ‘말’로 대응, 대범한 태도” 주장(3/14,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4일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잇따른 입장 발표는 핵 억제력을 가진 측의 대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이날 ‘도발자들의 최후 발악’ 기사에서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행동’을 취하지 않고 각종 성명과 발언 등 ‘말’로 대응한 것은 “승패와 진퇴를 판가리하는 대결전에서 열세에 몰린 측은 버릇없이 덤비고 우세를 차지한 측은 대범한 태도를 취하는 법”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힘.
 - 신문은 이어 “조선(북한)이 핵 억제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 지역의 안보질서가 바뀌었다”며 “조선에 대한 위협과 공갈을 구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호전 세력들은 충격을 크게 받아 과도하게 반응했다”고 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한미 군사훈련을 “몰린 자들의 억제할 수 없는 긴박감과 초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美, 北국외노동자 외화벌이 차단…김여정 이끄는 北선전부 제재(3/17,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제재조치들을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함.
 - 특히, 미국 재무부는 이 같은 행정명령에 근거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는 노동당 선전선동부도 새로운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주목된다고 뉴스는 전함.
 - 또한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담은 이번 행정명령에는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북한의 국외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이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초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과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고 전함.
- **美 “정치적 불모 삼지 말라”…北에 억류대학생 즉각 석방 촉구(3/17, 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워비아(21)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데 대해 북한이 미국 시민을 ‘정치적 불모’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함.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미국 시민들을 정치적 어젠다를 추구하기 위한 불모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어 “미국 정부에 있어 외국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전과 안녕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다”고 밝힘.
- **美합참의장 “北의 억류 美대학생 15년형 선고는 극도로 무책임”(3/18, 연합뉴스)**
 -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워비아(21)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북한 정권의 극도로 무책임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판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함.

- 그는 “북한 정권의 행동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일은 새삼 놀랄 일도 아니다”면서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지켜봤을 것”이라고 지적함.
- 던포드 합참의장은 그럼에도 미국인들이 여전히 북한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 “종교 단체”라고 언급하면서 “지난 몇 년간 1만5천 명 가량이 관광객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고, 이 가운데 13명이 체포됐다고 한다. 이는 뉴스에 나온 통계”라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마. 대중국

■ 제재후 북중접경 北식당 여종업원들 실종…“비자발급 제한”소문(3/15, 연합뉴스)

- 이달 초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북중 접경지역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함.
- 15일 북중접경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후 북한 함경북도·양강도와 인접한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과 훈춘(琿春) 등지의 북한 식당 4~5곳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수십명이 잇달아 자취를 감췄다고 전함.
- 연변자치주의 한 소식통은 “얼마전부터 옌지, 훈춘에 있는 북한 식당 중 평소 술을 팔고 가무(歌舞)를 제공하는 업소들이 문을 닫고 종업원들이 사라졌다”며 “지방정부 관련 부서에 문의하니 이런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북한 핵실험 등의 돈을 죄는 방안의 하나로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재에 나섰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함.

■ “中 산둥성 잉커우항, 북한 선박 입항 전면 금지”(3/20, 아사히신문)

- 중국 동북지방 제2의 항만도시인 랴오닝(遼寧)성 잉커우(營口)시가 최근 북한의 모든 선박 입항을 금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전함.
- 신문은 잉커우항만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이는 북한의 핵실험과 사실상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석탄 수입제한 등을 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보다 엄격한 조치라고 설명함.
- 이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에도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신문은 해석함.

바. 대일본

- “日, 총련간부·과학자 등 22명 방북시 재입국금지”(3/14, 교도통신)
 -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독자 제재 차원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 22명에 대해 방북시 일본 재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함.
 - 방북 시 재입국이 금지되는 대상에는 허종만 의장과 부의장, 국장을 포함한 조선총련 간부와 총련계 대학인 조선대학교 관계자 등 17명과, 재일조선인 자연과학자와 기술자들로 구성된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고문 및 회원 등 5명이 포함됐다고 통신은 전함.

- 일본, 북한 미사일 발사 대비...패트리엇 배치(3/19, 교도통신)
 - 일본 방위성은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미사일이 일본 영역으로 날아오면 요격하도록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18일 전함.
 - 통신은 파괴조치 명령은 지난 16일 내려졌으며 18일에 다시 명령이 내려졌다고 전함.
 - 이어 통신은 방위성은 이를 위해 도쿄 방위성 부지 내에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함.

사. 대러시아

- 주북 러대사 “북한과 경제·인문교류 강화하겠다”(3/19, 스푸트니크방송)
 -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과의 경제 및 인문 교류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방송이 19일 보도함.
 - 마체고라 대사는 지난 17일 구소련과 북한의 경제문화협정 체결 67주년을 기념한 자리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결과 유엔 안보리가 경제, 금융, 운송 등 강경한 대북제재 정책을 결의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처럼 민간 분야뿐 아니라 인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이어 “현재의 긴장 상황을 쇄신해 나가고 협력의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긴장 상황을 확대하는 행동들은 피해달라”고 지적했다고 방송은 전함.

아. 국제기구

- “유엔인구기금, 北 출산보건 사업에 24만달러 투입”(3/17, 미국의소리)
 - 유엔인구기금(UNFPA)이 올해 북한에 24만 달러(한화 2억 8천만 원 상당)를 투입해 출산보건과 인구개발 분야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함.
 - 유엔인구기금은 1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출산보건 사업을 평안남도과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내 11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자궁 경부암을 검진해 치료하고, 임신부들 대상으로 매독 검사를 하며, 피임약 등 가족계획 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힘.
- 안보리, 긴급회의서 “북한 탄도미사일 강력 규탄” 언론성명 채택(3/19, 연합뉴스)
 - 안보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하고 전날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한 데 대해 논의한 뒤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비판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하는 데 합의함.
 - 언론성명은 “지난 10일과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강한 비난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이어 북한에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으며, 북한 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제재 이행을 위해 2배의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함.

자. 기타 국가

- “필리핀, 북한 선박 또 검색…무기 등 금지품목 발견 못해”(3/15, 마린트래픽, 마닐라블러틴)
 - 15일 민간 선박정보 사이트 ‘마린 트래픽’과 필리핀 일간 마닐라블러틴에 따르면 화학제품 운반선 ‘테레사 베고니아’호가 지난 10일 필리핀 남부 미사미스 오리엔탈 항에 입항함에 따라, 필리핀이 자국 항구에 들어온 또 다른 북한 선박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짐.
 - 이 선박은 투발루 선적의 4천893t급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팜오일을 실고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지 세관의 한 소식통은 “이 선박에는 22명의 선장과 승무원이 타고 있으며 모든 북한 사람”이라고 매체에 말했다고 전함.
- 스리랑카서 달러 뭉치돈 운반하던 북한인 적발…나흘째 조사(3/17, 연합뉴스)
 - 스리랑카를 경유해 중국으로 가던 북한인 2명이 거액의 달러를 현금으로 운반한

사실이 적발돼 나흘째 스리랑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함.

- 17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오만에서 출발해 스리랑카를 경유,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북한인 2명은 지난 14일 스리랑카 콜롬보 공항에서 환승하던 중 미화 15만 달러(1억 7천550만 원)를 현금으로 소지한 것이 세관에 적발됐다고 전함.
- 스리랑카 세관은 이들을 경찰로 이송했으며 중범죄를 조사하는 범죄수사국(CID)이 현재 이들을 상대로 달러 보유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캄보디아, 훈센총리 방북 초청 거절…北김영남 등 방문도 거부(3/17, 연합뉴스)**

- 캄보디아 정부는 17일(현지시간) 리수용 북한 외상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캄보디아 방문과 훈센 캄보디아 총리에 대한 방북 초청을 거절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함.
- 춤 순리 캄보디아 외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홍기철 캄보디아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오전 호르 남흥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김 상임위원장과 리 외상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훈센 총리에게 북한 공식방문을 위한 초청 의사를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함.
- 그러나 남흥 장관은 바쁜 국내 업무로 김 상임위원장과 리 외무상의 방문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으며 그는 같은 이유로 훈센 총리에 대한 북한 초청도 거절했다고 순리 대변인은 덧붙였다.
- 그러나 순리 대변인은 김 상임위원장과 리 외상이 언제 캄보디아를 방문하기를 희망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뉴스는 전함.

- 일본 방위상의 '안전보장관련법' 정당화 발언(다른 나라들 속에서 '안전보장관련법'을 전쟁법처럼 비판은 제기되지 않았음)에 대해 "안전보장관련법은 전쟁법"이라고 질타(3.14, 중앙통신·민주조선)
- 미국의 국제전범재판소 신설 움직임은 "다른 나라들을 전쟁범죄자로 몰아붙여 그 뒤에서 자기의 범죄적 죄행을 가리워 보자는 술책"이라고 주장(3.14, 중앙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3월 14일 쿠바 근로자 중앙대표단 면담(3.14,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ICBM(미니트맨-3) 시험발사(2.25) 관련 '미국이 北제재요 뭐요 하며 복닥소동을 피우고 저들은 인류를 멸살시킬 전략핵타격수단을 시험 발사하는 행동은 세계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파렴치성의 극치'라며 '세계 평화의 교란자'라고 재차 비난(3.15,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北-쿠바단결위 연차회의, 3월 15일 평양에서 진행(3.15,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직업총동맹대표단(단장: 김동선 직총 부위원장), 3월 15일 베트남과 말레이시

- 아 일정 마치고 귀환(3.15,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최고재판소, 3월 16일 北 억류 美 대학생 오토 웬비어에게 노동교화형 15년 선고(3.16, 중앙통신·중앙방송)
- 세실 헤이니 美 전략사령관 발언(핵무기 현대화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 관련 ‘미국이야말로 인류를 핵전쟁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는 핵 범인’이라며 ‘미국 때문에 세계에는 새로운 핵군비 경쟁, 핵전쟁 위험이 조성되고 있다’고 비난(3.16,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정일 생일(2.16) 즈음 축전을 보내온 미얀마·시리아·나이지리아·우간다 대통령 등에게 답전(3.16,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수용(외무상), 3월 15일 터키 앙카라 차량 폭탄테러 관련 同國 외무상에게 위문 전문(3.16, 중앙통신)
- 미국의 北 ‘광명성-4’호는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 규정에 대해 “주권국가의 자주·합법적 권리를 박탈하려는 불순한 기도 중단 및 평화적 위성발사에 관한 철면피한 행위 즉시 철회”를 주장(3.17, 중앙통신)
- 北-러 ‘경제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3.17) 67주년 즈음 ‘지난 60여년간 兩國 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의 협조와 교류 성과 회고 및 전통적 친선관계의 새로운 단계로 추동’ 강조(3.17, 중앙통신·노동신문)
- 日 외무성의 ‘위안부 강제연행 부인(강제연행 증언은 허위·날조)은 “과거범죄를 합리화, 정당화하여 군국주의 부활과 재침의 발판을 마련하자는데 있다”며 ‘과거 최악 인정 및 사죄·배상’ 촉구(3.17, 중앙통신·노동신문)
- 리수용(외무상), 3월 17일 離任 주북 몽골 대사와 담화(3.17, 중앙통신)
- 北 정부 대변인 성명(3.4)·외무성 대변인 담화(3.4)를 3월 15일 유엔 총회 및 안보이사회 공식문건 ‘A/70/776-S/2016/214호’로 배포(3.17, 중앙통신)
- 주북 쿠바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3월 17일 국제친선전관관 참관(3.17, 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대표단(단장 : 리종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조국통일연구원 원장), 3월 17일 잠비아 방문차(국제의회연맹 제134차 총회 참석) 평양 출발(3.17,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조선 학생체육 선수단(단장 : 송세박), 3월 17일 평양 도착(3.17, 중앙통신)
- ‘존 C. 스테니스 항모강습단 부산기지 입항’에 따른 對北발언(강력한 메시지, 응징 의지 과시) 관련 ‘공화국을 그 무엇으로 놀래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며 ‘선불리 달려든다면 죽탕쳐 버릴 것’이라고 지속 위협(3.18, 중앙통신·민주조선)
- 재일조선학생체육선수단, 3월 18일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 참배(3.18, 중앙통신·중앙방송)
- 한미연합훈련의 참수작전을 언급하며 ‘우리(北)에게 있어서 미국 본토는 더 이상 먼 곳이 아니다’라며 ‘미제는 무모한 마지막 도박이 저들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3.19,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핵탄경량화·탄도로켓 대기권 재돌입 기술 보유 및 신형 대구경 방사포·반탱크 유도무기 체계’ 등 첨단 전략무기 과시 및 “이제 더는 미국 땅은 안식처가 아니다”고 ‘美 본토 핵공격’ 위협(3.20, 중앙통신·노동신문)
- 일본 대표의 ‘성노예제도’ 부정 및 韓日 ‘위안부 합의’에 반하는 발언들은 “국제무대에서 성노예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가로막고 특대형 과거 죄악을 묻어버리려는 속심”이라며 ‘올바른 사죄, 성근한 배상’ 촉구(3.20,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3월 20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 공항에서 UAE 항공사 여객기(‘플라이두바이’ 소속) 추락사고(3.19)’ 위문 전문(3.20,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 3월 20일 이란 한산 루하니 대통령에게 ‘이란의 새해’ 축전(3.20,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 3월 20일 튀니지 베지 카이드 에셉시 대통령에게 ‘튀니지 국경절’ 60주년 축전(3.20, 중앙통신)
- 러시아 주재 北 대사관, 3월 17일 ‘北-러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67주년 연회 마련 및 러시아 외무성·원동발전성·국기회의·국회·정당·기관 일꾼 등 초대(3.20, 중앙통신)

2.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김정은 “핵탄두 폭발시험·로켓발사 빠른 시일내 단행”(3/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탄도 로켓 전투부(미사일 탄두 부분) 침투의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을 지도하면서 “해당부문(핵탄두 폭발시험과 탄도로켓 시험발사 부문)에서는 사전 준비를 빈틈없이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모의시험 뒤 “군사 대국들이라고 자처하는 몇 개 나라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자력자강의 힘으로 당당히 확보함으로써 탄도로켓 기술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됐다”며 만족감을 표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어 그는 “나라의 방위력과 군수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백두산 혁명강군의 불패의 군력을 비상히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당 중앙의 군사전략전술 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식의 다양한 군사적 타격수단들과 주체탄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한다”고 역설함.

- **北김정은, 평양에 제2의 미래과학자거리 건설 지시(3/1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에 제2의 미래과학자거리인 ‘려명거리’를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동지가 현지에 나와 금수산태양궁전과 룡흥네거리 사이에 일떠설 려명거리 건설을 선포하고 건설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전하면서, 김 제1위원장의 현지지도 날짜는 밝히지 않음.
 - 김 제1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려명거리 건설은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이라며 “올해 중에 반드시 일떠세움으로써 주체조선의 필승불패의 전통을 다시금 과시하자”고 강조했다고 전함.

- **북한군, 대남 상륙 상륙저지 훈련…김정은 지휘(3/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 제1위원장이) 인민군 상륙 및 반(反) 상륙방어(상륙저지) 연습을 지도하시였다”며 “감시소에서 (리명수) 총참모장으로부터 연습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연습개시명령을 내리시였다”고 보도함.
 - 통신은 훈련 목적에 대해 “실용적인 상륙 및 반상륙방어연습을 통하여 해군과의 협동작전 밑에 남반부(대한민국) 작전지대에서 활동하게 될 적후전선부대들과 기계화보병부대들의 신속한 남반부 작전수역에로의 해상기동과 기습적인 상륙작전전투조직 및 지휘의 현실성을 검토하고 해안차단물 극복능력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김정은의 ‘건축브레인’ 마원춘 소장→대좌 또 강등(3/18, 노동신문)**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건축 브레인’인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의 계급이 또다시 강등됐다고 18일 보도함.
 - 노동신문은 18일 김 제1위원장의 ‘려명거리’ 건설 지시 소식을 전하면서 김 제1위원장을 수행한 마 국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도함.
 - 직전 계급이 소장이었던 그는 이 사진 속에서 한 단계 낮아진 대좌 계급장을 달고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신문은 계급 강등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그가 건설 관련 사업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해 문책을 당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北주민들, 정권 2인자 김원홍 끝아…보위부 권한막강”(3/1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인민보안부 관할 업무까지 담당하는 등 권한이 점차 커지

- 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평양의 한 소식통은 RFA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보위부의 위상은 하늘을 찌르는 데 반해 인민보안부의 권한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이제는 인민보안부에서 취급하던 일반 경제사범까지도 보위부가 다룬다”며 “인민보안부는 여성들 머리카락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이빨 빠진 고양이 신세가 됐다”고 설명함.

■ 北 김명식 전 해군사령관, 부총참모장 직함 달고 등장(3/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의 상륙 및 반상륙(상륙 저지) 훈련을 참관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김명식을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인 해군 중장 김명식 동지’라고 호명함으로써, 지난해 경질됐던 북한 김명식 전 해군사령관이 부총참모장 직함을 달고 1년여 만에 복귀한 사실이 확인됨.
- 김명식이 공식석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해 2월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김명식의 경질 사유로 어뢰가 장착돼 실전 배치된 해군 어뢰정을 분실했다는 설과 비리 때문이라는 설 등이 제기됨.

다. 공식 행사

■ 北, 김일성 생일 한 달 앞두고 ‘태양절 띄우기’ 시동(3/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일성 동지의 탄생일을 경축하는 영국준비위원회가 7일에 결성되었다”며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앤디 브룩스가 선출되었다”고 보도하면서,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한 달 앞두고 추모 분위기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짐.
- 통신은 전날에는 체코와 이란에서 경축 준비위원회가 각각 출범했다며 “준비위원회는 3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김일성 동지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 행사들을 의의 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고 밝힘.

라. 주요 기관 행위

■ 北김정은, ‘탄도미사일 재진입체’ 선전…軍 “아직 확보 못했다”(3/15,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체(RV:Re-entry Vehicle)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함.

- 뉴스는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은 지상에서 발사된 ICBM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재진입하는 기술로 ICBM을 개발하는 데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기술로 꼽히고 있으며, 이 기술을 확보하고 핵탄두까지 소형화했다면 핵무기 탑재 ICBM은 기술적으로 완성된다고 설명함.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5일 재진입체 기술 완성을 선언한 것은 사실상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미국 본토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위협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고 뉴스는 덧붙임.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참관 아래 “탄도로켓 전투부침두(탄두)의 대기권 재돌입 환경모의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하면서, 이 자리에서 김 제1위원장은 “군사대국들이라고 자처하는 몇 개 나라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자력 자강의 힘으로 당당히 확보했다”고 주장함.
- **北, ‘ICBM 재진입체’ 추정사진 공개…‘핵탑재 ICBM’ 능력 과시용(3/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탄도 로켓 전투부 침두의 대기권 재돌입 환경모의시험’ 참관 소식을 전하며 재진입체로 보이는 버섯머리 모양의 물체 사진을 내보내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했다며 ‘탄도로켓 전투부(탄두) 침두’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함.
 - 이 사진 속에는 여러 겹 구조로 제작된 이 물체와 함께 재진입체 설계도로 보이는 그림도 실렸으며, 그림 주변에는 재진입체의 부품과 관련 설명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글씨들이 적혀 있으나, 글씨가 작고 사진상으로 뿌옇게 보여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게 돼 있음.
 - 북한이 보도한 사진 속 물체에는 고온에 들어갔다 나온 듯 드문드문 열에 탄 자국이 남아 있으며, 재진입체 하단부에는 방열에 필요한 섬유재료도 보이며, 발사대 모양의 장치에서 고온의 화염이 재진입체로 뿜어져 나오는 장면도 공개함.
- **北, 동해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노동미사일’ 추정(3/18, 연합뉴스)**
 -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중거리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의 강도를 한 단계 높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합동참모본부는 18일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55분께 평안남도 속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힘.
 -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약 8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거리를 고려할 때 노동미사일인 것으로 추정되고,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해 미사일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38노스 “북, 잠수함미사일 개발 꾸준히 적극 추진”(3/18, 38노스)

-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이런 미사일을 장착할 잠수함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가 17일 밝힘.
-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스는 이 매체를 통해 지난 1월 27일과 지난달 16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 마련된 전용 부두와 약 1km 떨어진 지상 미사일 사출시험대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관측됐다고 설명함.
- 그는 바지선에 위장망이 설치돼 있었고, 지난달 사진에서는 잠수함 바로 옆에 길이 10m, 폭 2.5m 정도로 보이는 물체가 놓여 있었다고 밝혔으며, 약 2개월간 이 부두에 정박된 잠수함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작업이 진행됐으며 최근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이어 버뮤데스는 북한의 SLBM 전력 확충 시도가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한 성공 확률이 낮은 일”이고 “현재보다는 미래의 위협”이라면서도 “지속해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38노스 “북한, 풍계리 시설 추가 핵실험 준비 마친 듯”(3/19, 38노스)

-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가 18일(이하 현지시간) 추정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이 매체는 지난 6일과 14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갯도 입구 부근에서 활발한 활동이 나타났지만, 터널을 추가로 굴착하는 활동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밝힘.
- 매체는 북쪽 갯도 입구와 연결된 별도의 핵실험용 공간이 조성돼 있을 수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최근 나타나는 활동들은 그런 공간과 그 공간으로 연결되는 통로에서 고인 물을 빼내는 등의 보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특이사항 없음.

- 지금 인민들 속에서 “자신을 정신 도덕적으로, 기술 실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학습열풍이 끓고 있다”고 선전 및 ‘정치 사상강국·군사강국·청년강국 지위를 지

키기 위한 전민학습 기풍' 장려(3.14, 중앙방송·노동신문)

- 「北赤」 지부들의 “주민지대 재해위험 감소”를 위한 ‘주민선전 사업(지식·상식 보급 등) 등 활동’ 강화(3.14, 중앙통신)
- ‘과학기술발전은 나라의 전도와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사’라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제국주의의 지배와 약탈을 면할 수 없고 튼튼한 군사력과 경제력도 마련할 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이익도 지켜낼 수 없다’고 자립적 과학기술 강조(3.15, 중앙통신·노동신문)
- 자강도, 배움의 천리길 학생소년궁전 마지막 단계에서 개건공사 주력(3.15, 중앙방송)
- ‘70일 전투를 계기로 전체 인민을 시련과 난관 앞에서도 자기 힘만을 믿고 일떠서는 굳센 의지의 소유자, 체현자들로 준비시키려는 것은 당의 의도’라며 ‘자강력 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70일 전투에서 새로운 천리마, 만리마속도와 영웅적 위훈을 창조해 나가자’고 호소(3.16, 중앙통신·노동신문)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미얀마 주재 北 대사에 정호범 임명(3.16,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의 자강력제일주의에 관한 사상을 연구체득하기 위한’ 사회과학부문 토론회, 3월 17일 사회과학원에서 리해정(사회과학원 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3.17, 중앙방송·중앙통신)
- 黨·최고인민회의 상임위·내각,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등 305개 단위(2015년도 인민경제계획 모범적 수행)에 ‘선군봉화상 쟁취를 위한 사회주의경쟁 공동순회 우승기’ 수여(3.17, 중앙방송)
- 각지 여맹조직·여맹원들(전국 25만여 명의 여맹 초급선전 일꾼·여맹원들), “70일 전투의 철야진군에 펼쳐나선 근로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 하기 위한 경제선동활동” 전개(3.17, 중앙통신)
- 유치원 교양원들을 위한 전자교양안(‘다매체편집물’로 1,400여건의 문서·그림·음성·동화상 자료)이 전국에 도입되는 등 “유치원 교육 조건과 환경 개선사업 전개” 선전(3.17, 중앙통신)
- 제18차 김일성화축전, 김일성 생일(4.15, 태양절) 즈음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 예정(3.18, 중앙통신·중앙방송)
- ‘오늘의 총진군은 대중적 영웅주의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 나가기 위한 일대 진공전이며 맹렬한 공격전’이라며 ‘70일 전투의 철야진군에서 대중적 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며 전례 없는 노력적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3.19, 중앙통신·노동신문)
- 박봉주(내각 총리), 낙원기계연합기업소·봉화화학공장 현지 요해 및 ‘70일 전투 노동자·과학자 등’ 격려(3.20, 중앙통신)

3. 경제

가. 정책 동향

- “北 당국, ‘70일 전투’ 위해 주민 대상 강제모금”(3/1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오는 5월 제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전개 중인 ‘70일 전투’를 위해 주민들에게 성금을 바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15일 보도함.
 - 함경북도 소식통은 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 당국은 표면적으로는 성금을 내세우며 ‘알아서 성의껏 내라’고 하지만 성금을 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에 사실상 강제 모금”이라며 “인민반장이 가가호호 돌며 성금을 걷고 있으며 북한 거주 화교들도 성금을 내야 한다”고 말함.
 - 소식통은 “주민들은 당국에서 성금 액수를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내는지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형편에 맞춰 알아서 내고 있다”고 전함.
- “北, 제재 빈틈노려 中에 여성근로자 대거 파견”(3/1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해외근로자 파견 금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여성 근로자들을 중국에 대거 파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17일 보도함.
 - 중국 단둥(丹東)의 조선족 소식통은 방송과의 통화에서 “15일 저녁 7시께 북한 노동자 200여 명이 단둥세관을 빠져나와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유유히 사라졌다”면서 “이들은 신의주를 거쳐 중국으로 입국한 20대 이상 여성들인데,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세관을 빠져나온 것을 봐서는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이어 “중국 관리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나온 북한 근로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말도 있다”고 덧붙임.

나.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국제제재에도 북한 물가 환율 안정세”(3/14, 데일리NK)

-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북한 내부의 시장물가와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보도함.
- 평안북도의 소식통은 최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유엔 제재로 시장에서 물품이 줄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서 “70일 전투로 시장이용 시간이 줄었지만, 시장은 오히려 활발하게 운영되고 물가에도 변동이 없다”고 말함.
- 매체에 따르면 현재 평양, 평안북도 신의주, 양강도 혜산에서 쌀 1kg이 5천100원과 5천150원, 5천8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실행되기 이전의 5천100원(평양·신의주), 5천260원(혜산)과 비슷한 수준임.
- 또 1달러당 환율은 평양 8천150원, 신의주 8천200원, 혜산 8천170원으로 대북제재 채택 전의 평양 8천200원과 신의주와 혜산 8천290원과 비교해 소폭 하락한 수준에 그쳤다고 전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유엔제재 후 대중국 北철광 수출 오히려 증가”(3/14,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 북한의 대(對)중국 정광(제련한 철광) 수출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함.
 - 함경북도 현지 소식통은 “국제적인 광물 가격 하락으로 침체를 보이던 무산광산의 철광 수출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출용 정광을 실은 차량들이 줄지어 북-중 세관을 거쳐 중국 선광장(철광을 분류하는 장소)으로 향하는 모습이 매일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방송이 전함.
 - 소식통은 “예전에는 북측 차량이 정광을 실어다가 북한세관 앞에 내려놓으면 중국 차량이 와서 실어가지만, 지금은 북한 차량이 세관을 통과해 바로 중국 선광장까지 간다”고 말함.
- “北, 中기업 매개로 러시아산 중유 밀수…‘제재 구멍’ 우려”(3/16, 산케이신문)
 - 북한이 중국 기업을 매개로 러시아산 중유를 밀수해왔다고 산케이신문이 16일 보도함.
 - 이 같은 밀수 경로가 유지되면 최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따른 대북 항공유 유입 차단망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함.
 - 북한이 밀수로 도입하는 러시아산 중유는 ‘마주트 M100’이며, 밀수 경로에는 중국 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전하면서, 장치만 있으면 M100으로부터 기술된 뿐 아니라 안보리의 대북 수출 금지품목인 항공유도 정제할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임.

- “북한, 아프리카 나미비아에 탄약공장 건설”(3/16, 미국의소리)
 - 아프리카 나미비아 정부가 북한이 자국 내에 탄약공장을 건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함.
 - 그러나 나미비아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난디-다잇와 부총리는 “나미비아 정부가 잘못된 일에 관여한 바 없고, 이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요청한 물음에 답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등 유엔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함.

- “北, 유엔제재 상황서 中건축자재 대량 수입”(3/18, 자유아시아방송)
 -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유엔의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북한은 오는 5월로 예정된 제7차 당 대회를 위한 속도전인 ‘70일 전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중국에서 대량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함.
 - 중국 랴오닝성 지방의 한 대북 소식통은 17일 방송에 “유엔제재가 시작된 이후에도 북한의 화물트럭들이 중국에서 건축자재를 계속 날라가고 있다”고 밝힘.
 - 이어 소식통은 “16일에도 건설자재를 가득 실은 20t급 화물자동차 수십 대가 단둥 세관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다”면서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대부분 ‘L’자형 강재와 플라스틱으로 된 PVC 파이프 관 등 공장 철골 구조물과 지붕, 교량을 고정하기 위한 트러스 등”이라고 설명함.

- 수도건설총 산하 단위들의 “중요대상건설(김일성경기장 개건 보수와 중앙동물원 2단계 개건 등 10여개 대상건설 마감공사) 추진” 선전(3.14, 중앙통신)
- 대흥청년영웅광산, 새로운 ‘알탄 점결제 생산 공정’ 확립 및 생산 확대(3.16, 중앙통신)
-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새로운 농작물 품종들 육종 선전(3.18, 중앙통신)
- 올해 콩 재배면적 1만여 정보 확장 등 “콩 농사 장려” 및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70일 전투 진입 이래 새 기준, 새 기록 돌파(3.1 하루, 주체철 생산계획 190% 초과 완수 등)” 보도(3.20, 중앙통신)

4.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한국기업 남겨둔 개성공단 상품 北장마당서 유통”(3/17,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달 한국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면서 현지에 남겨두고 온 완제품이 북한 장마당에서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17일 보도함.
 - 평양의 한 소식통은 “판매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개성공단 물건으로 양말과 신발 등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물건들이 전국에서 팔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이어 이 소식통은 “개성공단에서 만든 신발은 장마당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고급 구두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제품임을 금방 알 수 있다”면서 “이런 구두라면 북한에서 최소 50달러는 주어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北, 중동지역 노동자 통제 위해 검열단 파견”(3/17,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동 파견 노동자들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검열단을 현지에 파견했으며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함.
 - 방송은 현지 언론을 인용해 “지난달 25일 북한 당국이 중동지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살피기 위해 6명으로 구성된 검열단을 파견했다”면서 “목적은 표면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의 생활과 활동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혹시 있을지 모를 반국가적 행위를 색출하는 것”이라고 밝힘.
 - 방송은 “현재 중동지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약 9천 명으로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고 설명함.

마. 사회 동향

- 황해북도 송림 인근서 규모 3.1 지진…“인공지진 아니다”(3/14, 연합뉴스)
 - 14일 오전 5시 17분께 북한 황해북도 송림 동쪽 21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의 파장 형태가 자연 지진으로 인공 지진과는 확연히 다르다”며 “지진 규모로 봐서 특별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함.

- **미국 구호단체 관계자들, B형간염 치료사업차 방북(3/16, 미국의소리)**
 -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미국 구호단체 관계자들이 B형간염 치료 사업을 위해 방북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최근 웹사이트에 하이디 린튼 단체 대표와 B형간염 전문가, 병원 개보수 전문가 등 10여 명이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힘.
 - 단체 측은 “북한 주민의 15% 이상이 만성 B형간염 환자일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며 “올해는 간염 치료와 예방 사업을 더욱 중점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평양 인근 규모 2.2 인공지진…“핵실험 아니고 발파 작업추정”(3/16, 연합뉴스)**
 - 16일 오후 12시 30분께 평양 남동쪽 34km 지점에서 규모 2.2의 인공 지진이 감지됐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함.
 -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진원지(지진 발생 깊이)가 1km 정도로 얕아 발파 작업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하면서, 다이너마이트 1t을 쓰면 지진 규모는 0.9 정도, 2t을 쓰면 2.5 정도가 감지되고, 발파 작업 때 일어나는 규모 3.0 미만 인공지진은 국내에서도 자주 감지된다고 뉴스는 설명함.

- **FAO “북한서 5년간 평양시 면적 5.6배 산림 사라져”(3/1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서 지난 5년 동안 평양시 면적의 5.6배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의 자료를 인용해 16일 보도함.
 - 현재 북한의 산림은 전체 국토 면적의 41.8%에 불과해 FAO가 분류한 산림화 3단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며, FAO는 북한 산림 황폐화의 요인으로 띄기밭 개간이나 벌목, 토양침식 등을 꼽음.

- **獨전문가 “北주민, 제재에 날카로운 상태”…평양방문 증언 소개(3/17, 연합뉴스)**
 - 최근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후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이 피로감을 보인다는 평양 방문 외국인의 간접 증언이 공개됐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함.
 - 북한 사정에 밝은 독일 한스자이텔재단의 베른하르트 켈리거 서울대표는 17일 서울 밝은사회회관에서 ‘대북제재 이후 출구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2차 통일한국포럼 축사에서 “최근 평양에 들어갔던 재단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사람들의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북한이 5월 초로 예정된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날짜를 거꾸로 세어 내려가면서 ‘70일 전투’ 구호를 외치고 있다”면서 “새벽 5시면 사람들을 공장으로 나가게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 “北 양강도 백두산관광철도 공사장 산사태로 5명 사망”(3/1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양강도의 백두산관광철도 공사장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돌격대원 5명이 사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함.
- 양강도의 소식통은 “17일 저녁 무렵에 백두산관광철도 위연-화전역 구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수십 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구조에 나섰지만 5명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함.
- 소식통은 “구조된 돌격대원들 수십 명은 인근 철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심각한 사람들이 많아 사망자가 더 나올 수 있다”면서 “사고는 산사태를 막기 위해 옹벽을 쌓다가 일어났다”고 설명함.

- “조국보위의 최전선 초소와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한” 평양시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시와 노래모임’, 3월 11~17일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진행 (3.17, 중앙통신)
- 北, ‘각지에서 중앙동물원에 10여 종의 수십 마리 동물들을 보내왔다’고 보도 (3.19, 중앙통신)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WSJ “北, KN-08 시험발사 한다면 가장 우려스러운 일”(3/15, 연합뉴스)**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제임스마틴비확산센터(CNS) 선임연구원인 멜리사 해넘은 "최근 북한의 발표들 가운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KN-08의 시험 발사를 암시한 것"이라며 "만일 북한이 핵무장 된 KN-08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면 매우 위험하고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함.
 - 해넘 연구원은 "북한의 이웃 국가들이 이를 '시험(test)'인지, 실제 '공격(attack)'인지 구별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고 강조함.
 - WSJ은 미국 관리들이 KN-08을 미국 본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전함.

- **美 전문가 “北, 아직 고풍렌즈 만들지 못한 듯”(3/15, 연합뉴스)**
 - 북한이 핵폭탄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핵실험에서 나타난 빈약한 결과에 비해 효과적인 핵폭발을 보장할 고풍렌즈를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 해군참모총장 과학정책 자문관을 지낸 시어도어 포스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명예 교수 14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밝힘.
 - 그는 "만약 이 같은 추정이 옳다면 여러 차례 걸친 북한 핵실험의 출력이 7킬로톤(kt)에 그친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북한의 경우 그들이 원하는 것을 터득하기 위한 기술지식을 가진 것은 확실하나 그들의 산업능력이 신뢰할만한 고풍렌즈를 제작할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함.
 - 포스틀 교수는 북한이 과거 4차례의 핵실험에서 명목상의 출력 치인 20kt에 훨씬 못 미치는 출력을 기록했다면서 그러나 7kt의 출력으로도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12.5kt에 버금가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함.

- **미국방부 “북한, 핵소형화 능력 못 보여줘”…기존 평가 유지(3/16,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15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이 아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기존의 평가를 유지함.

- 이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4일 '빠른 시일 내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하겠다'며 도발의 수위를 가일층 높인 가운데 나온 것임.
-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아직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능력을 보지 못했다"며, 다만 "북한이 아직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해서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지금보다 더 심각한 위협을 줄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음.

■ **38노스 "북, 잠수함미사일 개발 꾸준히 적극 추진"(3/18, 연합뉴스)**

-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이런 미사일을 장착할 잠수함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가 17일 밝힘.
-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스는 이 매체를 통해 지난 1월 27일과 지난달 16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 마련된 전용 부두와 약 1km 떨어진 지상 미사일 사출시험대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관측됐다고 설명함.
- 그는 북한의 SLBM 전력 확충 시도가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한 성공 확률이 낮은 일"이고 "현재보다는 미래의 위협"이라면서도 "지속해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38노스 "북한, 풍계리 시설 추가 핵실험 준비 마친듯"(3/19,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월 네 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가 18일(이하 현지시간) 추정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이 매체는 지난 6일과 14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갭도 입구 부근에서 활발한 활동이 나타났지만, 터널을 추가로 굴착하는 활동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이같이 밝힘.
- 풍계리 핵실험장의 남쪽 갭도 입구 부근에서도 제설작업이 이뤄지는 등의 활동이 포착됐지만, 서쪽 갭도 부근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38노스는 덧붙임.

나. 미·북 관계

■ **오바마 "효과적 대북제재 계속 강화" 돈줄 차단 행정명령 곧 발동(3/15,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오전 국무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북한과 이란, 러시아발(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함.

-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우리의 공통된 도전과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평화와 안보를 공고히 하는 기존의 규칙과 기준들을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의 힘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란이 '핵합의'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고, 또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그러면서 "다가오는 워싱턴D.C.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정상 간 다양한 논의를 통해) 글로벌 핵안보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덧붙임. 이와 관련,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은 오는 31일 개최되는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미국 국무부, 김정은 추가 핵도발 시사에 "도발적 언행 삼가라"(3/15,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빠른 시일 내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 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애나 리치-알렌 국무부 동아태국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북한은 긴장을 악화시키는 도발적 언행을 삼가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백악관은 이날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으나 북한이 연일 쏟아내는 도발적 수사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임.
- 미국의 북핵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핵탄두 폭발시험과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조만간 제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 주시 중임.

■ 미국,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용 이지스구축함 추가 배치(3/15, 연합뉴스)

-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태평양 지역에 최첨단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춘 함정(BMDs)을 추가 배치함.
- 14일(현지시간) 미군 기관지 성조지에 따르면 미 해군은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유도 미사일 구축함 배리(DDG-52, 만재배수량 8천900t)함을 한반도 등 북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7함대의 모항인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横須賀) 기지에 최근 배치함.
- 특히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 관련국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아태 지역으로의 미 해군 전력 재배치는 관심을 끌고 있음.

- **조선신보, '한반도 긴장' 美에 책임전가...“3년전 비핵화 언명”(3/15, 연합뉴스)**

 - 연일 '핵위협'을 통해 한반도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이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협정 체결을 전제로 한 비핵화 카드를 꺼내들며 미국에 대해 사태 수습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음.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5일 '도발자들의 최후 발악(하)' 기사에서 "조선(북한)은 3년 전 조미(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를 제안했을 때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정책 과제라고 언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 조선신보는 그러나 미국이 이를 무시한 채 '전략적 인내' 전략을 펴 오히려 한반도 긴장 상태를 조성하는 등 "평화 담판의 기회를 버리고 교전 상대에게 핵 타격력 강화를 위한 시간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잇따른 핵 위협 발언이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힘의 균형을 이룩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도"이기 때문이라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황을 미국 탓으로 돌림.

- **美 "정치적 볼모 삼지 말라"...北에 억류대학생 즉각 석방 촉구(3/17, 연합뉴스)**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워비어(21)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데 대해 북한이 미국 시민을 '정치적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판함.
 - 국무부의 마크 토너 부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선고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본다"며 "억류된 미국 시민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공식 주장에도, 이 같은 공개적 사례를 보면 북한은 정확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음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함.
 - 토너 부대변인은 "워비어가 형사재판 과정을 밟고 있다면 북한은 그를 특별 사면하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즉각 사면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美, 北국외노동자 외화벌이 차단...김여정 이끄는 北선전부 제재(3/17,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제재조치들을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음. 특히, 미국 재무부는 이 같은 행정명령에 근거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는 노동당 선전선동부도 새로운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주목됨.
 - 또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답은 이번 행정명령에는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포함됨.

- 이와 함께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 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sectoral ban)이 적용됐으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포함됨.

■ **던포드 美합참의장 “北, 美본토에 핵·미사일·사이버위협”(3/18, 연합뉴스)**

-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은 물론 사이버공격 수단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고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지적함.
- 던포드 합참의장은 17일(현지시간)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국방부 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계획, 그리고 악성 사이버 공격수단의 사용 의지는 (미국) 본토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증언함.
- 특히 북한의 사이버공격 능력에 대해 그는 "현재는 방어 능력이 취약한 전산망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리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 북한은 이를 더 수준 높은 전산망에도 사용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으로 개발하기 위해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예상함.

■ **미국, 北 미사일 도발에 “안보리 결의 위배…긴장고조 삼가라”(3/18, 연합뉴스)**

- 빌 어번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논평을 내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밟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어번 대변인은 "미군은 북한의 도발 위협 앞에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며 "역내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도 논평에서 "우리는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함.

■ **“美, 北 해외노동자 수익금 핵개발 전용 정보 수집중”(3/19, 연합뉴스)**

- 미국은 북한의 노동자 해외송출 실태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앞으로 대북 제재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함.
-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VOA와의 전화인터뷰

에서 "노동자 해외 송출을 통한 수익이 북한 정부로 흘러들어 가며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된다"며 "미국은 북한이 수용소 수감자들과 대거 동원된 인력, 그리고 정부에 고용돼 해외로 파견된 노동자들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강제노동에 투입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 리치 앨런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6일 발동한 대북제재 행정명령과 관련해 "미국이 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국내 권한을 통해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의 기준을 정하는 노력을 선도하기 위해 타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함.

■ '北노동자 외화벌이 차단'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13722호(3/20,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발동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이 13722호라는 번호를 부여받음. 이로써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008년 6월의 13466호, 2010년 8월의 13551호, 2011년 4월의 13570호, 2015년 1월의 13687호에 이어 모두 5개로 늘어남.
- 새로운 행정명령 13722호는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을 이행하기 위한 일종의 '시행령'이면서,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띠고 있음.
- 이번 행정명령에는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으며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 (sectoral ban)이 적용됐으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포함돼 있음.

다. 중·북 관계

■ "유엔제재 후 대중국 北철광 수출 오히려 증가"〈RFA〉(3/14,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 북한의 대(對)중국 정광(제련한 철광) 수출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함.
- 함경북도 현지 소식통은 "국제적인 광물 가격 하락으로 침체를 보이던 무산 광산의 철광 수출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출용 정광을 실은 차량들이 줄지어북-중 세관을 거쳐 중국 선광장(철광을 분류하는 장소)으로 향하는 모습이 매일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함.
- 소식통은 "수많은 중국기업이 북한의 주민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생산해 내고 있다"며 "이 기업들이 중국의 대북제재로 문을 닫는다면 중국이 입는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대북제재 때문에 수많은 자국민이 일자리를 잃고 많은 공장이 문을 닫는 사태를 중국 정부가 절대로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함.

- [단독]제재후 북중접경 北식당 여종업원들 실종…“비자발급 제한”소문(3/15, 연합뉴스)
 - 이달 초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북중 접경지역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림.
 - 15일 북중접경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후 북한 함경북도·양강도와 인접한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과 훈춘(琿春) 등지의 북한 식당 4~5곳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수십명이 잇달아 자취를 감춤.
 - 연변자치주의 한 소식통은 북한 핵실험 등의 돈을 벌려는 방안의 하나로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재에 나섰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함. 북한과 맞닿은 중국 동북3성의 중심도시 선양(瀋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짐.
- 中, 김정은 '핵위협'에 "한반도 정세 긴장시키는 행위 말라"(3/15, 연합뉴스)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핵위협' 발언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는 관련 당사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요구를 철저히 이행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모든 당사국은 한반도의 정세를 추가로 긴장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 루 대변인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는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강조함.
 - 그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은 지금까지 줄곧 안보리 결의안을 엄격하게 이행해 왔다"고 강조한 뒤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의 이행 문제와 관련, "중국의 내부 법률·법규에 따라 각 주체와 중국 기업에 관련 내용을 조속히 통보함으로써 수출입 관리 규정 등에 근거해 기업들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中 단둥 호시무역구, 반쪽 운영…“대북제재로 파행 장기화”(3/16, 연합뉴스)
 - 북중 민간무역 활성화를 위해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 개설된 '조중 변민 호시무역구(朝中邊民互市貿易區)'가 만 5개월이 되도록 파행 운영을 거듭

하고 있음.

- 16일 단둥 대외경제무역유한공사에 따르면 호시무역구는 작년 10월 중순 개장 이래 북한업체의 참여가 없어 당분간 반쪽짜리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특히 최근에는 북한 핵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이런 파행이 장기화 될 전망이어서 공사측이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음.
- 뤄무하이젠(端木海建) 단둥 대외경제무역유한공사 부총재는 "조선(북한) 업체 들이 입점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한 데 대해) 조선 당국이 불만을 품고 (무역구 입점 불허)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로선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라고 고충을 토로함.

■ **주한중국대사 "중국, 안보리 대북제재안 엄격하게 유지할 것"(3/16, 연합뉴스)**

- 추귀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는 16일 오전 고려대 경영대학 주최로 고려대 LG 포스코경영관에서 열린 'KUBS 글로벌 앰배서더 렉처 시리즈'의 초청 특별강연 에서 한 학생이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 입장을 묻자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공공연히 위반하며 핵실험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한 것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어긴 데 따라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함.
- 그러나 그는 중국이 보기에 북한에 대한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언급 하면서 북한 핵 문제는 협상과 대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진단함.
- 추 대사는 또 "중국은 원칙을 강조하는 나라로, 외부적 압력과 영향 때문에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며 미국의 압박 때문에 대북제재에 동참했다는 일부 시각을 부인함.

■ **"中, 北화물 검색강화"…동북3성내 북한식당 폐업도(3/16, 연합뉴스)**

-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중국 동북 3성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색이 강화되고 있고, 특히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식당 가운데 일부가 폐업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중 관계에 정통한 정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화물과 관련, 적어도 중국 측 세관인력이 증원배치 되는 등 전수조사에 못지않은 강력한 검색을 하는 분위기이며, 실제 (그런 현상 을) 관찰되고 있다"고 전함.
- 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식당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최근 경기불황 현상까지 겹치면서 동북 3성내 북한 식당 가운데 일부가 문을 닫는

경우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짐.

- “北, 제재 빈틈노려 中에 여성근로자 대거 파견”〈RFA〉(3/17, 연합뉴스)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해외근로자 파견 금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여성 근로자들을 중국에 대거 파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17일 보도함.
 - 중국 단둥시 일대는 수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의류공장과 가죽공장, 가발공장 등에 불법 취업해 일하는 곳이라고 방송은 설명함.
 -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 소식통도 RFA에 "현재 중국에 나오는 북한 근로자들 가운데는 30~40대 아줌마들도 적지 않다"면서 "유엔제재 결의에 해외인력 파견 금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의 해외인력 수출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말함.

- 中 저가항공 평양취항 계획 무기한 연기…“대북제재 영향”(3/17, 연합뉴스)
 - 중국의 저가항공사가 당초 올해 2월께 시작하려던 상하이(上海)~북한 평양간 정기노선 취항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사실이 17일 확인됨.
 - 저가항공사인 춘추(春秋)항공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시장적인 요인과 회사의 운송능력 관계 등으로 인해 당초 일주일에 4편으로 계획했던 상하이~평양 노선의 개설 계획을 당분간 연기했다"고 밝힘.
 - 춘추항공 측은 "평양 취항 계획의 연기 결정이 북한의 핵실험과 대북 제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으나, 업계와 외교가에서는 이번 결정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북 제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많음.

- “안보리 대북제재에도 북한산 철광 中에 여전히 반입”(3/17, 연합뉴스)
 -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이달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나 북한산 철광이 여전히 중국에 반입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도 북한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돈줄 죄기가 아직 미흡한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음.
 - 17일 북중접경의 대북소식통들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후에도 북한은 함경북도 무산군 소재 무산광산에서 채굴한 철광을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현지 업체들을 통해 민생품의 명목으로 중국에 반입하는 것으로 드러남.

- 접경지역 대북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대북제재에 나섰으나 저조한 경제성장에 시달리는 지방정부가 편법적인 대북교역을 다소 눈감아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北, 유엔제재 상황서 中건축자재 대량 수입”(RFA)(3/18, 연합뉴스)**
 -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유엔의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북한은 오는 5월로 예정된 제7차 당 대회를 위한 속도전인 '70일 전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중국에서 대량 수입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 랴오닝성 지방의 한 대북 소식통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제재가 시작된 이후에도 북한의 화물트럭들이 중국에서 건축자재를 계속 날라 가고 있다"고 밝히며, "대북제재가 발표된 직후 중국으로 들어오는 북한 차들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에서 북한으로 나갈 물건은 다 나간다"고 덧붙였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는 북한 주민 생활과 관련된 민생차원의 물품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건축자재의 수출은 계속 용인하는 것으로 보임.
- **中 단둥 작년 경제성장을 '뒷걸음'...북중관계 냉각 '후폭풍'(3/18, 연합뉴스)**
 - 18일 단둥시정부 2016년도 공작(업무)보고에 따르면 북중교역의 거점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의 지역경제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 현지 관측통들은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으로 북중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양국 간 교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함.
 - 그러나 향후 성장 전망은 한층 불투명할 것으로 점쳐지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시행에 따라 최대 북중교역 도시로서 단둥의 위상이 급격히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관측통들은 전망함.
- **中, 대북 경제협력 빠진 5년간 경제발전 청사진 확정(3/18,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적시하지 않은 향후 5년간의 경제발전 청사진을 확정지었음.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서 통과된 '국민 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 계획, 2016~2020년)' 요강 전문을 공개함. 공식적으로 채택된 13·5 계획 요강에는 새로운 동북진흥 전략을 거론한 부분에서 러시아, 일본, 한국 등의 국가와 합작 플랫폼 건설을 지지 한다는 내용은 들어 있으나 북한에 대한 언급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이를 두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글로벌 신(新)경제구상인 '일대

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서 사실상 북한을 완전히 들어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이번에 나온 정부 보고서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나온 것으로 중국 중앙정부가 북한과의 협력을 배제하거나 적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겠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됨.

■ “유엔제재후 중국내 北식당 손님 뚝…고객유치 안간힘”(RFA)(3/18, 연합뉴스)

- 중국 연길의 한 소식통은 지난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가 가속화되면서 지금은 (북한 식당에) 손님이 거의 끊긴 상태"라고 밝힘.
- 이 소식통은 "일부 북한식당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식당에서 일하던 젊은 북한 아가씨들을 불러다 노래와 춤 공연을 보강하는 등 손님 끌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함.
- 방송에 따르면 북중 교역의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선 작년 말까지 북한 식당 15곳이 영업했으나 최근 3곳이 폐업해 종업원 수십 명이 북한으로 돌아갔음.

■ 中, 북한 ‘노동미사일’ 발사에 “안보리결의 준수하라”(3/18,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18일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우리는 조선(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조선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 안에 명확한 (제한)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함.
- 이어 "우리는 동시에 모든 관련 국가가 억제하고 반도(한반도) 상황의 긴장이 더욱 상승하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임.

■ “중국, 북한 석탄 수입 여전…‘민생목적 허용’이 대북제재 구멍”(3/18,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2주 넘게 지났으나, 중국 동북부 항구들을 통해 여전히 북한산 석탄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제사회나 언론의 눈이 쏠린 단둥(丹東)에서는 제재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음.
- 그러나 점점 북한산 석탄이 들어오는 항구 수가 늘어나고 있어 세관 차원의 수입규제가 중국 전역에서 이뤄져야 하는데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완전히 조율되지는 않고 있음.
- 유엔 안보리가 지난 2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거래는 금지되지만, '민생 목적'인 경우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부분이 중국에 북한과 무역을 지속할 문을 열어주는 '구멍'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함.

■ “中 산등성 잉커우항, 북한 선박 입항 전면 금지”(3/20, 연합뉴스)

- 중국 동북지방 제2의 항만도시인 랴오닝(遼寧)성 잉커우(營口)시가 최근 북한의 모든 선박 입항을 금지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지난 2일 채택된 대북 제재결의에서는 북한으로부터 석탄·철광석 등 광물자원 수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핵·미사일 개발과 관계없는 '민생 목적'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에 따라 잉커우 등의 항구에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에도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의 입항이 가능해 '제재의 구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음.
- 그러나 항만 관계자 및 북·중 무역상 등에 따르면 잉커우 상구에서는 항만 당국이 지난 16일 항구 측에 북한의 모든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라는 구두 통보가 있었음.

라. 일·북 관계

■ “日, 총련간부·과학자 등 22명 방북시 재입국금지”(3/14,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독자 제재 차원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 22명에 대해 방북시 일본 재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함.
- 방북 시 재입국이 금지되는 대상에는 허종만 의장과 부의장, 국장을 포함한 조선총련 간부와 총련계 대학인 조선대학교 관계자 등 17명과, 재일조선인 자연 과학자와 기술자들로 구성된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고문 및 회원 등 5명이 포함됐다고 교도는 전함.
- 이에 따라 조선총련은 5월 초 36년 만에 열리는 조선노동당 대회(평양)에 현직 수뇌부 인사들을 파견하기 어렵게 됨. 일본 정부는 2006년부터 조선총련 간부 등 8명 안팎에 대해 방북 시 재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2014년 5월 북일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그해 7월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재조사에 착수하자 이 같은 제재를 해제한 바 있음.

■ 日관방 “핵탄두 폭발 조기 단행 용인 못해”(3/15,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5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탄두 폭발시험 조기 단행 발언을 한데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며 기자들에게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한다는 자세를 보이지는 않고 도발적 언동을 하고 있다"고 말함.

- 스가 장관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 추가 도발 행위를 중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및 관계국과 긴밀히 연대해 대화와 압력, 행동대 행동 원칙을 통해 전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함.
- 그러나 그는 북한의 핵개발 단계에 대한 질문에는 "평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수집 및 분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격상 구체적인 정보 내용 및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답을 피하겠다"고 함.

■ **아베 “北미사일 발사 정보수집 안전확인 지시”(3/18,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곧바로 정보 수집과 일본 선박의 안전 확인, 대 국민 정보 제공을 지시했다"고 말함.
-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아침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며 이같이 밝혔으며, "현 단계에서 (일본 측) 피해 발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부연함.

■ **日외무상 “北미사일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항의할 것”(3/18,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북한이 18일 오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명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강하게 비난 한다"고 밝힘.
-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힌 뒤 "중국 베이징(北京) 대사관 루트로 (북한에)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는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의 지시에 따라 정보 수집·분석, 경계 및 감시에 나섰다고 전했으며,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각료 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협의함.

■ **일본, 북한 미사일 발사 대비…패트리엇 배치(3/19, 연합뉴스)**

- 일본은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요격 태세에 돌입함. 일본 방위성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미사일이 일본 영역으로 날아 오면 요격하도록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18일 전함.
- 파괴조치 명령은 지난 16일 내려졌으며 18일에 다시 명령이 내려졌으며, 방위성은 이를 위해 도쿄 방위성 부지 내에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짐. 일본은 앞서 16일 해상배치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을 배치한 것으로 보임.

- 다케다 히로후미(武田博史) 방위성 보도관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낙하지점에 대해 "일본의 방위식별권 내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함.

마. 러·북 관계

■ “러 가스프롬, 대북협력 중단…제재 효력 발휘”(RFA)(3/16, 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효력을 발휘해 러시아의 국영 에너지기업인 가스프롬이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함.
- RFA는 러시아 현지 언론을 인용해 가스프롬이 유로본드 신규 발행과 관련한 양해각서에서 대북협력 중단을 명시했다며 "가스프롬의 대북협력 중단 선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대북제재가 일정 부분 효력을 발휘한 방증으로 풀이된다"고 밝힘.
- 가스프롬은 그동안 북한과 가스관 매설과 천연가스 탐사·채굴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가스프롬 측은 양해각서에서 "북한과 거래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 어떤 거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힘.

■ 러 우크라 “北 탄도미사일 발사는 또다른 도발…심각한 우려”(3/18,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비상임이사국인 우크라이나가 18일(현지시간) 한목소리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함.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안드레이 데니소프 중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잇따라 발사한 데 대해 또다른 북한의 도발이라고 규탄함.
-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프란츠 클린체비치는 "러시아 국경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일정한 위협을 부정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면서도 "극동 지역의 러시아 방공 시스템은 상황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모든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함.
-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우크라이나 외무부 공보실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 한다"면서 "그러한 도발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조성한다"고 비판함.

■ **주북 러대사 "북한과 경제·인문교류 강화하겠다" (3/19, 연합뉴스)**

-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는 17일 구소련과 북한의 경제문화 협정 체결 67주년을 기념한 자리에서 북한과의 경제 및 인문 교류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방송이 19일 보도함.
- 그는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결과 유엔 안보리가 경제, 금융, 운송 등 강경한 대북제재 정책을 결의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처럼 민간 분야뿐 아니라 인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이날 자리를 함께한 북한의 리용남 대외경제상 및 고위급 간부들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협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바. 기타

■ **이달말 핵안보 정상회의서 북핵 다룬다(3/15, 연합뉴스)**

- 오는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핵안보 정상 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알려짐.
- 북수의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14일 "북한 핵문제가 핵안보의 직접적 이슈가 아니어서 공식 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사안 자체가 엄중한 데다가, 내용상으로도 연관돼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함.
- 특히 한·미·일 3국이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별도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어 성사될 경우 북핵 문제가 주된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 **"필리핀, 북한 선박 또 검색...무기 등 금지품목 발견 못해"(3/15, 연합뉴스)**

- 필리핀이 자국 항구에 들어온 또 다른 북한 선박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짐. 15일 민간 선박정보 사이트 '마린 트래픽'과 필리핀 일간 마닐라블러틴에 따르면 화학제품 운반선 '테레사 베고니아'호가 지난 10일 필리핀 남부 미사미스 오리엔탈 항에 입항함.
- 세관 소식통은 선박을 검색했으나 총기류나 밀매품 등 금지 품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함.
-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항만 당국이 이 선박의 국제해사기구 등록번호를 조사한 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 선박은 아닌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항만 당국은 이 선박의 출항을 허용할 것으로 전해짐.

- 유엔 “제재 대상 北기업 대표들 중동·아시아·아프리카 활보”(3/15, 연합뉴스)
 - 유엔의 제재대상인 북한 기업의 대표들이 지난 수년 동안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를 활보해왔다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함.
 - KOMID라는 영문 이름으로도 불리는 조선광업개발회사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장비,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는 주요 통로로 지목되고 있는데,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이 업체 대표 가운데 몇몇은 외교관이며 다른 몇몇은 각각 두 개 이상의 다른 여권을 써 추적을 피해왔다고 밝힘.
 - 조선광업개발회사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문에 2009년부터 유엔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상태였고, 여러 국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인물 7명 가운데 4명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내려진 이달 초 유엔 결의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올랐음.
 - 제재 명단에 적시된 7명이 2012년 10월 19일부터 작년 10월 19일까지 중국에 출입한 횟수는 최소 59차례로 집계됐으며, 보고서에는 조선광업개발회사 관계자 1명이 더 언급됐으나 러시아의 반대로 제재명단 등재는 철회됨.

- “北, 中기업 매개로 러시아산 중유 밀수…‘제재 구멍’ 우려”(3/16, 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 기업을 매개로 러시아산 중유를 밀수해왔다고 산케이신문이 16일 보도함. 이 같은 밀수 경로가 유지되면 최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따른 대북 항공유 유입 차단망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함.
 - 북한이 밀수로 도입하는 러시아산 중유는 '마주트 M100'이며, 밀수 경로에는 중국 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산케이는 전함.
 - 장치만 있으면 M100으로부터 가솔린 뿐 아니라 안보리의 대북 수출 금지품목인 항공유도 정제할 수 있다고 산케이는 전함.
 - 아울러 중국 해관(세관) 총서상에 2014~5년 연속으로 대북 원유 수출량이 '제로(0)'로 적시됐음에도 북한이 '오일 대란'을 겪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러시아산 M100 도입 루트가 있기 때문이라고 산케이는 소개함. M100은 원유 가격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

- 유엔 대북제재 2주…中·러도 경험중단 등 이행 가시화(3/17,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된 지 약 2주가 지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결의안 이행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모습임.
 -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계획을 보류하거나 중단하고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의 입항을 줄줄이 거부하는 등 결의안의 틀 속에서 양자 차원의 조치에 시동을 걸고 있음.

- 한 소식통은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만큼 결의안에 나온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당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관련 지침과 규정이 나오면 제재 이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함.

■ 교도 "이달 31일까지 워싱턴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3/18, 연합뉴스)

- 교도통신에 따르면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한 3자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별도로 3개국 정상회담을 할 예정임.
-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2014년 3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뤄진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2년 만으로, 세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임.
- 아베 총리는 3국 회담과 별도로 한국, 미국 정장과 각각 양자회담을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짐.

■ 안보리, 긴급회의서 "북한 탄도미사일 강력 규탄" 언론성명 채택(3/19,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하고 전날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한 데 대해 논의한 뒤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비판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하는 데 합의했음.
- 언론성명은 "지난 10일과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강한 비난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한에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함.
- 단거리라고 하더라도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안보리는 단거리나 중거리일 경우에는 별도 회의를 하지 않았음. 그러나 8일 간격으로 두 번이나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안보리의 권위를 무시한 것으로, 그냥 넘어갈 경우에는 추가 도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언론성명까지 채택함.
- 언론성명은 결의안이나 의장성명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안보리가 한 목소리로 북한에 경고한다는 의미가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 스트라이커 여단, 한국서 시가지 훈련…'北 WMD 제거작전'(3/15, 연합뉴스)**
 - 미국 육군의 신속기동부대인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팀(SBCT: Stryker Brigade Combat Team)이 15일 한국에서 우리 군과 함께 실전적인 시가지 전투 훈련을 실시함. 훈련은 유사시 북한의 핵심 시설을 장악하고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스트라이커 여단은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하는 미 육군의 기계화부대로, 유사시 항공기로 세계 어느 곳의 전투 현장에도 96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고도의 기동성을 특징으로 함.
 - 한미 양국 군이 진행 중인 올해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습도 유사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포함해 어느 때보다 공세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한미, 이천서 연합 도하훈련…유사시 北 진격능력 점검(3/16, 연합뉴스)**
 - 한미 양국 군의 공병부대가 16일 도하훈련을 함께하며 연합 도하작전 능력을 점검함. 하천을 포함한 장애물 극복 기술을 숙달함으로써 유사시 양국 군의 북한 진격 능력을 극대화하는 연습을 한 것임. 이
 - 육군은 "한미 양국 군이 도하 장비의 호환성을 검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한미 공병부대의 연합작전 분야를 새로 개척했다"고 강조함.
 - 우리 군 제7공병여단과 미군 제2전투항공여단은 지난 9일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작전합의각서(OMOA)를 체결했으며, 지난 14일부터 3박 4일의 일정으로 7공병여단 도하훈련장에서 연합도하훈련을 진행 중임.

- **한미 키리졸브훈련 오늘 종료…'北 핵심표적' 타격능력 키웠다(3/18, 연합뉴스)**
 - 한미 양국 군의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이 18일 종료됨. 한미 양국이 작년 6월 서명한 '작전계획 5015'가 처음 적용된 이번 키리졸브 연습은 유사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해 최고지도부와 핵·미사일 시설 등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짐.
 - 군 관계자는 "이번 키리졸브 연습을 통해 한미 양국 군은 유사시 북한 핵심 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정밀 타격함으로써 위기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다"고 설명함.
 - 한미 양국 해병대와 해군의 연합훈련인 쌍룡훈련도 이날 끝나며, 한미 양국

군이 키리졸브 연습과 함께 시작한 독수리(FE) 연습은 다음 달 30일까지 계속 진행된다.

- **한미, 내일 첫 '고위급 대북제재' 협의…“제재 올인” 메시지(3/20,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21일 오후 서울에서 '고위급 대북 제재' 협의를 함. 고위급 제재협 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제재국면에서 한미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형태의 회동임.
 - 한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뿐 아니라 대니얼 프리드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과 미 재무부와 상무부의 제재담당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도 극히 이례적임.
 -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와 한미 및 각국의 독자제재,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등 3가지 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함.
 - 한미는 제재협의를 통해 중러를 향해 대북압박 메시지를 강하게 발신하면서도 이를 위한 한미중 협의 가동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가능성이 있음.

나. 한·중 관계

- **한중 외교장관 통화…윤병세 “제재이행 집중할 때”(3/15,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4일 밤 이뤄진 전화 통화에서 양국이 이번 결의 채택 과정에서 보인 긴밀한 협조에 대해 평가하고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한중 외교수장은 통화에서 양국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제재 도출 이후 북핵 접근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율한 것으로 관측됨.
 - 중국 측은 안보리 결의 도출 이후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거론하며 대화 담론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중국 측에 대화보다 제재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우리 측의 입장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윤 장관과 왕 부장은 "한중관계가 상호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6자회담 수석대표급 등 인사 교류와 관련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짐.
- **6자수석 김홍균 “中, 한미중 3자협의 개방적 자세로 검토키로”(3/19, 연합뉴스)**
 - 베이징을 방문 중인 우리 쪽 신임 6자회담 수석 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귀국 직전 특파원들과 만나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한미중 3자협의 가능성도 논의했다"며 "우리 측은 안보리 결의 이행 과정에서의 협력 등을 위해 한미중 3자 협의 개최 추진을 제안했고, 중국 측은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함.
- 양측은 안보리 결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긴밀한 소통을 가진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반적인 대응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 했다고 김 본부장은 전함.
- 중국은 그러나 이번 접촉에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 입장과 '사드'(THAAD·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의 뜻도 재차 피력한 것으로 관측됨.

다. 한·일 관계

- **日신문 "한일, 이달중 서울서 국장급 협의 추진"(3/15,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은 외교부 국장 간 협의를 이달 중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조율을 시작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5일 보도함.
 - 협의가 성사되면 양측은 작년 12월 28일 도출된 군 위안부 합의의 이행 방안,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또는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 군 위안부 합의의 핵심 중 하나인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 및 일본의 10억 엔(104억 원) 출자 등은 만만치 않은 한국 내 반대 여론 속에 2개월 반가량 지나간 현재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 **오노데라 日 전방위상 "위안부 피해자에 매우 죄송"(3/15, 연합뉴스)**
 -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일본 방위상은 2차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15일 전함.
 - 자민당 소속 6선 중의원 의원인 그는 전날(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랜드연구소에서 가진 강연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군(軍)에 의한 강제성이 있었던 없었던 인권상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함.
 - 자민당 소속 전직 방위상이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에 대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과한 것은 이례적임.
- **'비정상의 정상화' 한일관계, 교과서 갈등에 다시 시험대(3/18, 연합뉴스)**
 -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의 첫 정상회담

- 과 12월 28일 양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계기로 '비정상상의 정상화'에 나섰던 한일관계가 18일 독도 영유권 주장 확대와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 모호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본 고교 교과서의 검정 통과로 다시 시험대에 올랐음.
- 그러나 이번 교과서 검정 문제로 '비정상상의 정상화'를 위한 길로 접어든 한일관계가 완전히 방향을 바꿔 역주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
 - 일본은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은 물론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고,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압박을 위한 일본 측의 협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한일 모두 교과서 검정과 관련한 긴장과 갈등을 급격히 고조시키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할 것으로 관측됨.

■ **아베 "한일정상 의사소통 좋은 일"...정상회담에 의욕(3/19,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의욕을 보였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함.
- 신문에 의하면, 전날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일한 정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제 상황 속에서의 과제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함.
-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작년 11월 2일 서울에서 처음 회담한 이후 약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며, 더불어 작년 12월 28일 군위안부 합의가 나온 이후 첫 한일정상회담이 됨.

라. 한·러 관계

■ **駐러시아 대사 "사드·나진하산, 한러관계 후퇴요소 아냐"(3/18, 연합뉴스)**

- 박노벽 주(駐)러시아 대사는 18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우리나라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 중단 등의 문제와 관련해 "한러 관계에 후퇴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힘.
- 한편, 주한미군 사드 배치 협의 문제로 러시아 외무부에 초치됐던 박 대사는 당시 '협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으로, 결정된 것처럼 단정 지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밝힘.
- 우리 정부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 중단과 관련해서는 민간 기업 등 사업의 실질적 주체 간에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아직 러시아가 "특정한 반응을 보인 것은 없다"고 전함.
- 박 대사는 한러 양자관계와 관련해 "우리가 북한의 위협 때문에 한미 동맹 관계를

맺어온 것은 (러시아가) 이해하고 있고, 이를 넘어서 해야 할 이슈가 많다"며 "냉전적 3각 구도는 더는 존재하기 어렵다"고도 함.

마. 미·중 관계

- **美재무 "제재, 이행 이전에는 이론에 불과...中과 이행 협의중"(3/16, 연합뉴스)**
 -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 "제재는 이행되기 전까지는 이론에 불과하다"며 "미·중 정부 당국자들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힘.
 - 루 장관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당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면서 현지 고위당국자들과 만난 사실을 소개하면서 "중국 당국자들이 이행에 관심을 보였다"며 "애덤 주빈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을 중국에 보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해 주빈 차관 대행은 15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北京)과 홍콩을 방문해 현지 고위당국자들과 만나 대북 제재 문제를 집중 협의 중임.
 - 루 장관은 다만 "중국은 양자적 제재보다는 다자적 제재가 적절한 수단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고강도 제재에 동의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함.

- **中 "중국이익 훼손 안 돼"...美대북제재 행정명령 경계(3/17, 연합뉴스)**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며 "첫째, 기존에도 여러 번 밝힌 것처럼 중국은 그 어떤 국가가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함. 또 중국은 현재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그 어떤 국가가 긴장 국면을 한층 끌어올리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덧붙임.
 - 루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이미 유관국가(미국)와의 접촉에서 그 어떤 독자적인 제재 행동으로 중국의 정상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훼손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표명했다"고 주장함.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 특히 이 제재에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포함돼 중국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 **美해군 “中, 남중국해 암초 매립 우려”…중국은 반발(3/18, 연합뉴스)**
 - 중국이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黃巖島>)를 매립할 우려가 있다고 존 리처드슨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17일(현지시간) 지적함.
 - 스카보러 암초는 2012년 중국이 실효 지배를 굳혔지만 이후에도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계속 벌이고 있고,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필리핀은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했고 판결이 조만간 나올 예정임.
 - 다만 목격된 중국 해군함들의 활동이 중재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과 관련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을 향해 적반하장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함.

- **中, 남중국해 군사화 비판에 ‘핵무기 대치’ 가능성도 거론(3/19, 연합뉴스)**
 - 중국이 미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비판에 대해 '핵무기 대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반박함.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8일 "중미 관계가 엉망이 된 상황에서 핵 역량은 앞으로 양국 의지의 최종적인 히든카드가 될 것"이라며 "따라서 중국은 흔들림 없이 핵 역량을 강화하고 2차 핵 타격 능력을 무단히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환구시보는 또 "미군 측이 '도발'을 강화하는 만큼 인민해방군의 남중국해에서의 반격성(군사) 배치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양측의 군사적 대치가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함.
 - 이 같은 중국의 격렬한 반응은 스콧 스위프트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지난 16일 호주 캔버라의 한 연설에서 "'힘이 곧 정의'라는 중국의 태도와 남중국해 도서의 군사기지화는 이 해역에서 전례 없는 무기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임.
 - 중국은 남중국해 군사기지화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과 함께 미국과 핵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서고 있음.

바. 미·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사. 미·러 관계

- **케리 미국무 내주 러시아 방문…푸틴과 시리아 사태 논의(3/16,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

- 한다고 AFP통신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함. 케리 장관은 러시아 방문 기간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번 회담은 정전 3주째로 접어든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주요 전력을 철수 시키겠다고 밝힌 직후에 나온 계획이라 주목받고 있음.
 - 미 국무부 관계자는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케리 장관의 방러는 러시아의 시리아 철군 결정과 연관된 것이 아니다"면서 "그의 방러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율되던 것"이라고 밝힘.
 - 케리 장관은 그러나 러시아의 철군 결정으로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고 외교적 방법으로 시리아를 복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훌륭한 가능성이 생겼다고 판단한다고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전했다.

아. 중·일 관계

■ 중일 외교장관 전화회담 "대북제재 엄격히 이행"(3/15, 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14일 전화 회담을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엄격하게 이행되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양측은 기시다 외무상의 중국 방문 추진에 관해서도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외교부도 홈페이지에 올린 중일 외교장관간 전화회담 소식과 관련해 양측이 현재 한반도 핵 문제를 논의하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전면적이고 온전하게 실현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전함.
- 왕 부장은 또 일본 측에 양국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희망함.

■ 日외무성, 중국의 남중국해 매표 비판 동영상 유포(3/15, 연합뉴스)

- 일본 외무성이 인공섬 조성 등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이고 있는 '현상변경' 행보를 비판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지난 6일자로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 '바다에서의 법의 지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15일 파악됨.
- 동영상에서 일본 외무성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바다에서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가 국제사회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는 내레이션에 이어 중국과 베트남 선박이 충돌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누가 보더라도 중국을 비판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함.
- 그러면서 일본 외무성은 "일본은 법의 지배 원칙을 철저히 하자고 호소하면서 해상 수송로의 연안 국가들과 바다를 지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필리핀, 인도

네시아, 베트남 등에 개발원조(ODA), 방위장비 협력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내레이선으로 소개함.

■ **중국 선박 3척 日 센카쿠 영해 한때 침범(3/16, 연합뉴스)**

- 16일 오후 2시께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열도 주변 영해에 중국해경국 소속 선박 3척이 잇따라 침입해 1시간 20분 가량 항해를 하다 영해 밖으로 나갔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17일에도 중국 당국의 선박이 센카쿠열도 주변 일본 영해에 침입했다. 중국해경국 소속 선박의 센카쿠열도 영해 침범은 올해 들어서 6번째임.

■ **“기시다 日외무상, 이르면 내달 중국 방문”(3/17,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이르면 내달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이 17일 보도함.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4일 기시다 외무상과의 전화 협의때 기시다의 올 봄 중국 방문을 받아들일 의향을 전했다고 닛케이는 소개함.
- 일본 측은 지난 1월부터 기시다의 방중을 제외했지만 중국 측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음.
- 외교관례상으로는 기시다 외무상이 2014년 11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에 맞춰 중국을 방문했던 만큼 이번엔 중국 외교부장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고 일본 외교가는 보고 있지만, 기시다가 방중을 추진하는 것은 중일관계를 진전시키려는 본인의 강한 의향에 따른 것이라고 닛케이의 취재에 응한 일본 정부 관계자가 전함.

자. 중·러 관계

■ **“러, 중국에 첨단 S-400 방공미사일 내년말부터 인도”(3/19, 연합뉴스)**

-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중국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첨단 S-400 방공 미사일을 내년 말부터 시작해 2019년 중반까지 모두 인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S-400('트라이엄프')은 지난 2007년부터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된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에서부터 전술탄도 미사일까지 비행물체는 무엇이든 파괴할 수 있는 최첨단 미사일임.
- 중국은 특히 미국이 한국에 배치를 추진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대응체제로 이 미사일의 대량 구매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은 러시아제 S-400 미사일의 최초 수입국이며, 애초 러시아는 기술 유출을

우려해 S-400 판매에 소극적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밀월관계를 회복하면서 중국 측의 구매 요청을 받아들임.

차.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유엔 다루스만 보고관, 북한 김정은 기소 촉구(3/15, 미국의소리)
 - 유엔인권이사회가 3월 14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북한인권 상황 보고회를 열었음.
 -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날 보고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김정은 제1위원장과 북한 수뇌부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년 전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하고 북한에 개선을 권고했지만 북한 정부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책임자들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이 극도의 상하 계급적 구조로 정권이 사회 작은 조직까지 철저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지도자인 김정은과 전 현직 고위 관리들에게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음.
 -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런 행태를 볼 때 북한 수뇌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결코 없으며, 이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는가에 중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어떤 구조와 방식으로 북한 수뇌부에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를 조사할 3명의 전문가 그룹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전문가 그룹을 통해 기존의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기소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임.
 -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책임자를 기소해야 한다는 다루스만 보고관의 권고를 미국은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 킹 특사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유린과 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미국은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정훈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는 이날 발언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북한 정권의 주장처럼 문제가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유엔 기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초청하며 인권 개선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북 ‘사회적 과제’에 주민고통 가중(3/1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노동당 제7차대회를 성과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70일 전투’를 벌여 놓은 가운데 주민들에게 ‘유휴(有休)자재 모으기’와 ‘좋은일 하기 운동’과 같은

‘사회적 과제’를 강제로 부담시켜 비난을 사고 있다고 복수의 양강도 소식통들이 전해왔음.

- 12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70일 전투’를 구실로 각종 사회적 부담이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늘고 있다”며 “그 중에서 ‘유휴자재 모으기’와 ‘좋은일 하기’는 할당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돈으로 대신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음.
- 북한은 ‘70일 전투’가 벌어지는 3월 한 달 동안 ‘유휴자재 모으기’로 매 가정세대 들에 공병 10개와 고철과 파지, 파고무를 각각 10kg씩 바치라는 과제를 주었는데 ‘유휴자재’는 인민반장들을 거쳐 동사무소들에서 거두어 간다고 그는 덧붙였다.
- 당세포는 ‘좋은일 하기’로 개별적 당원들에게 개나 돼지가죽을 바치라는 과제를 추가했고 청년동맹과 여성동맹은 ‘청년호’와 ‘여맹호’라는 탱크(탱크)를 만들어 인민군대에 보내준다는 구실로 고철 20kg씩을 바치라는 과제가 추가됐다고 그는 강조했다.

■ 미 하원 인신매매 청문회, 중국 내 북한 여성 문제 논의(3/17, 미국의소리)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프리카 국제 보건 인권 국제기구 소위원회가 오는 3월 22일 인신매매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함.
- 이 청문회에는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조진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 여성 인신매매 실태에 대해 증언할 예정임.
- 워싱턴 지역에서 탈북자 구출과 정착 지원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재미탈북민연대를 이끌고 있는 조 씨는 지난 1998년 처음 탈북한 뒤 중국에서 10년 가까이 살면서 네 번이나 강제북송을 당했음.
- 한편 미국의 인권단체인 자유북한연합이 주관하고 한국의 북한인권 단체들이 함께 참가하는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오는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열릴 예정임.
- 자유북한연합의 수전 솔티 대표는 올해 행사는 북한 정권이 붕괴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음.

■ 북 해외노동자 송금루트 차단 관건(3/17,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3월 16일 발표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에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 이 같은 내용은 지금까지 유엔이나 유럽연합, 그리고 각국의 대북제재안에도 없던 새로운 것임.
-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제재 대상을 ‘북한으로부터 노동자를 송출하는 데 관여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책임 있는 인사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때문에 이번에 새로 포함된 북한 해외노동자 관련 제재가 어떻게 이뤄지고 또 어떤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북한 노동자를 중개하는 제3국인이나 실제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의 기업까지 제재대상으로 삼는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임.
 - 이런 가운데 해외노동자 관련 제재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특정부문 제재’나 ‘세컨더리 보이콧’ 등의 방식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으로 외화가 흘러 들어가는 자금통로를 차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성공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북한 노동자들은 공식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은밀한 방법으로 달러를 북한으로 보내기 때문임.
- **‘북한, 14호 정치범 수용소 옆에 새 수용소 신설한 듯’(3/19, 미국의소리)**
-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와 민간 고해상도 위성사진 분석업체인 ‘올소스 어널리시스’가 3월 17일 북한 처마봉 통제구역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 보고서는 처마봉 통제구역이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72km, 그리고 14호 정치범 수용소인 개천관리소에서 남동쪽으로 9.5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소개했음.
 - 그러면서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15년 5월 사이에 이 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이 지역에 새로운 정치범 수용소를 신설해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음.
 - 아직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위성사진을 분석하고 하부구조를 다른 정치범 수용소들과 비교하면 처마봉 통제구역을 북한이 전면 가동 중인 5번째 정치범 수용소로 볼 수 있다는 것임.
 - 미국과 한국 정부는 아직 처마봉 통제구역을 정치범 수용소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보고서는 처마봉 통제구역이 20.4km 길이의 보안용 울타리에 둘러싸인 잘 관리된 소규모 정치범 수용소라며, 3개의 막사와 7개의 외곽 감시초소, 3개의 입구와 검문소가 확인됐다고 밝혔음.
 - 특히 2013년 10월과 2014년 4월에는 이중 울타리와 9개의 감시초소 등 경비가 매우 삼엄한 수용단지 2곳이 신설됐다고 전했다.
 - 보고서는 수용소 내 경제활동이 주로 광업과 농업, 단순 경공업 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14호와 15호, 16호 정치범 수용소에 비해서는 경제 활동이 훨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 이에 대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치마봉 통제구역이 북한이 내세우는 강제노동을 통한 재교육보다는 처벌과 격리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징후로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 북한인권

■ 박대통령 “인권탄압 기아 北폭정 멈출 때까지 단호 대응”(3/14,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4일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의 길로 나서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기아로 내모는 폭정을 멈출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재외공관장 만찬 행사에서 “현재 북한은 주민생활의 피폐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권의 생존만을 위해 핵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박 대통령은 재외공관장들을 향해 “먼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안보위기에 철저히 대응해가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북한 정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보다 차원 높은 국제공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이어 박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및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등과 관련,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한 뒤 “이제부터 이런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외공관장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 한국 통일부, ‘북한인권재단’ 설립 실무팀 구성(3/14, 미국의소리)

- 한국 통일부는 지난 3월 3일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실무팀(TF)을 구성했다.
- 통일부에 따르면 이 실무팀은 서기관급을 팀장으로 통일부 직원 4명으로 구성됐고 재단에서 근무하게 될 인력 채용과 관련 예산 확보 등 준비작업을 담당하게 됨.
-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형태로 설립되며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함께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 정책 개발과 함께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됨.

■ 국내외 인권단체, 북한 국제사법재판소 즉각 회부 촉구(3/15, 연합뉴스)

- 유엔위치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3월 14일 유럽 유엔본부에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는 북한의 강제 노역 문제 등을 집중 조명하며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제사법재판소(ICC) 즉각 회부 등을 촉구했음.
-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이날 오후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 행사에서 탈북자들의 증언과 대한변호사협회 김태훈 북한인권특별위 위원장의 국제법 검토 보고 등을 토대로 이같이 요구했음.
 - 대한변협 김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가 빠져 있어 이를 다시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 노동자를 파견 받은 국가가 현장을 정기 검사하고 법을 어긴 북한 감독관을 강제송환해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안보리의 ICC 즉각 회부를 강조했다.
 - 김 위원장은 특히 “로마협약에 가입한 폴란드와 같은 국가는 법을 어긴 북한 감독관을 ICC에 직접 고소하고, 국제무역기구(WTO)·국제노동기구(ILO) 가입 회원국은 북한 주민의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 나아가 “각 대륙의 전직 ICC 재판관이나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대표 등으로 비공식 국제형사재판소를 만들어 북한 인권문제를 다뤄야 한다”면서 “NGO 대표들과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日, 유엔 인권이사회에 北인권비난 결의안 제출…9년 연속(3/17, 연합뉴스)**
- 일본은 3월 16일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즉각 일본으로 귀국시키고, 정치범 수용소 폐지 및 수용자들의 즉각 석방 등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또 유엔 인권이사회 내에 법률가 등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팀을 설치해 국제형사재판소 등을 활용해 북한 지도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음.
 - 일본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9년 연속임.
 - 이런 움직임에 대해 북한은 경직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리수용 북한 외상은 지난 3월 1일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 **캐나다 의회서 ‘북핵·인권’ 대규모 토론회(3/17, 자유아시아방송)**
- 캐나다의 인권단체 북한인권협의회는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북한해방과 북핵 무용화 전략’을 주제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북한인권협회의 이경복 회장은 3월 17일 캐나다 상 하원 의원이 함께 주재하

며 다양한 계층의 연사가 참석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핵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행사에는 주디 스그로(Judy Sgro) 전 이민부 장관과 한국계인 연아 마틴 상원의원, 자유당 인권간사로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원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는 어윈 코틀러(Irwin Cotler) 전 법무장관 등이 연사로 참석할 예정이다.
- 또한 요덕수용소 출신 정광일 노체인(No Chain) 대표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을 직접 경험한 데이빗 슬린(David Slinn) 초대 평양주재 영국대사 등도 증언할 계획이다.
- 이 회장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연사들은 토론토 내 8개 한인단체가 지난달 캐나다 정부에 촉구한 대북제재 및 인권관련 공동성명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해줄 것으로 전망했다.

■ 독일하원 인권위서 북한 인권참상 규탄 공동성명 채택(3/18, 연합뉴스)

- 독일 연방하원의 ‘인권·인도적 지원’ 상임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북한인권 상황을 규탄하며 북한 지도부의 처벌 및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개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인권위는 3월 16일 북한의 인권 유린 참상을 비판하며 김정은 정권 지도부가 국제형사재판소나 인권 유린 특별재판소에 회부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위원회의 에리카 슈타인바흐 기독교민주당-기독교사회당연합 간사가 밝혔다.
- 공동성명은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 인권문제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등을 근거로 김정은 정권은 오늘날 어떠한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의 규모로 인권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하고, 무엇보다 심각한 인권 유린 희생자들은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 성명은 정치적 반대자, 정치범, 종교적 소수자, 폐쇄된 북한을 탈출하려고 시도하거나 외국의 정보를 취득한 이들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면서 몇몇 경우는 외국과 접촉하거나 외국 정보를 취득했다는 것만으로도 억압을 당하거나 구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나아가 북한의 참담한 인권 상황을 담은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유괴, 악의적인 감금, 실종, 강제이주, 기아, 노예화, 폭력, 강제낙태, 고문, 강제노역 등을 열거하고서 강제노역 구역 5곳에 정치범 12만 명이 최악의 조건 아래 수용돼 있다고 소개했다.
- 성명은 또한 북한인 5만여 명이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하고, 2010년 이후 1천328명이 공개 처형됐다면서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폭력과 테러를 사용하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 원내 단일교섭단체로 기능하는 기민당-기사당연합 7명, 사회민주당 5명, 좌파당 2명, 녹색당 2명 등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권위는 기민-기사당연합과 녹색당 주도로 이번 성명을 채택했음.

■ “北 정치범수용소 해체해야”…탈북 여성 4명 北인권실태 증언(3/19, 연합뉴스)

- 북한을 탈출해 한국이나 제3국에 살고 있는 여성 4명이 3월 18일 유엔본부에 있는 미국 뉴욕에서 북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증언했음.
- 김은주, 루시아 장, 김영순, 이현서 씨 등 4명의 탈북 여성은 이날 오후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서 열린 ‘탈북 여성들의 목소리: 억압과 회복’이라는 행사에서 패널로 참석했음.
- 이 행사는 지난주 개막한 ‘제60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기간에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명하기 위해 유엔 주재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대표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것임.
- 북한이 전날도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도 아랑곳없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제재와 더불어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됨.

3. 탈북자

■ 탈북자들, 전 세계에서 북한 정권 인권 유린 규탄(3/18, 미국의소리)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경호원 출신의 탈북자 이영국 씨는 2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인권회의에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 동안 북한 독재자는 초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비난했음.
-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씨는 통역을 통해 김 제1위원장이 ICC에 회부되면 이 사실이 북한 전역에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위 관리들을 비롯한 북한 주민들이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서울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 강미진 씨는 영국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북한그룹이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 여성들의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했음.
- 북한 통일전선부 출신의 탈북자 장진성 씨는 지난 3월 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북한이 수령주의를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말했음.

- 그런가 하면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조진혜 씨는 오는 3월 22일 미 하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국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북한 여성 인신매매 실태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 이밖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요덕15호 관리소 출신 정광일 씨는 캐나다에서 북한 실태를 증언할 예정이다.

4. 이산가족

- 특이동향 없음.

5. 납북자

- '일본인들, 북한 관련 자국민 납치 문제 가장 관심'(3/15, 미국의소리)
 - 일본 내각부가 올해 1월 일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외교에 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가 3월 12일 공개됐음.
 - 일본인의 북한에 대한 관심사항을 복수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3.5%가 일본인 납치 문제를 꼽았음.
 - 이어 북한 핵 문제가 76.1% 그리고 미사일 문제가 60.5%로 뒤를 이었음.
 -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응답자 비율은 2014년 10월 조사했을 때 비해 4.8% 포인트 줄었음.
 - 이에 반해 핵에 대한 우려는 지난 번 조사에 비해 22.1% 포인트 늘었고, 미사일에 대한 우려도 4.9% 포인트 증가했음.
 - 올해 들어 북한이 잇달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실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미 구호단체, 간염 치료사업 준비 위해 방북(3/17, 미국의소리)
 -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북한에서 본격적으로 B형 간염 항바이러스 치료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선 준비작업을 위해 방북 길에 올랐음.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최근 웹사이트에 하이디 린튼 대표와 B형 간염 전문가, 병원 개보수 전문가 등 10여 명이 3월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 이들은 이번 방북 기간 중 개성과 평양에 있는 제 2간염 전문병원을 개조하고 장비를 준비하는 등 간염 치료사업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 또 앞서 보낸 지원물품이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5월로 예정된 수도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준비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늦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항바이러스 B형 간염 치료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유엔인구기금, 올해 24만 달러 대북 지원…출산보건·인구개발 등(3/17, 미국의소리)
 - 유엔인구기금은 대북사업 계획(2011-2016)에 따라 현재 북한에서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음.
 - 첫 번째 사업은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출산보건(Reproductive Health)’ 사업임.
 - 이 사업은 현재 평안남도과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내 11개 시, 군에서 진행되고 있음.
 - 자궁경부암을 검진해 치료하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매독 검사를 실시하며, 피임약 등 가족계획 용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또 산모 사망률을 줄이고 영유아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옥시토신과 마그네슘을 전국에 지원하고 있음.
 - 북한 교육위원회와 함께 북한 대학에 임산부의 출산을 돕는 산과학 과정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이 기구는 밝혔음.
 - 유엔인구기금이 주력하고 있는 두 번째 사업은 북한의 데이터 생성과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인구개발 사업(population and development)’임.
 - 유엔인구기금은 이를 위해 김일성종합대학 인구연구소가 국제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구통계학과(demography/population studies)를 설치하고 교수진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음.
 - 또 북한 중앙통계국, 인구센터의 인구조사, 설문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제공하고 있음.

8. 북한동향

- 특이동향 없음.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